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의 의의와 전망

전효관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본고는 남북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의 의의를 점검하고 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실천 형태를 모색한다. 본 고에서는 사회 문화적 접근을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구분한다. 전자가 사회적 격차와 차이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통합적 문제 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라는 문화의 동질화에 초점을 두는 교류와 협력의 문제 의식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접근은 사회 문화 교류보다 일층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요약하자면, 사회 문화적 접근은 사회적 재조직화의 문제 설정에 입각하여 남북 사회의 변화를 포괄함으로써 공존의 기반을 형성하려는 접근법을 뜻한다. 본 고에서는 사회 문화적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 남한 사회의 개혁 과제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민족적·단일적 주체에서 시민적·다중적 주체로의 변화를 통한 통일 운동의 전개 필요성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영역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남한 내부의 분단 문화와 반개혁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개발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상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머리말

본고는 사회 문화적 접근이 가지는 의의와 가능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조건 속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가지 전제를 다룬다. 사회 문화적 접근은 단순하게 “남과 북 사이의 사회 문화 교류가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만

으로는 불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사회 문화적 교류를 절대화하는 태도는 교류의 방향과 성과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할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지나간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간의 사회 문화적 교류는 상대체제에 대한 비난의 소재가 되었고,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교류 경험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사회 문화적 접근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사회 문화적 접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남북한의 교류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이한 체제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상이한 삶의 양식은 정치 경제적 통합으로 극복될 수 없으며, 좀 더 장기적인 실천 과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접근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성과가 백지화되어온 역사적·사회적 힘과 조건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교류가 결실을 맺도록 사회 문화적 접근의 의의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정부 들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 주도의 교류는 남북 관계의 역사에서 새 장을 여는 획기적 성과를 예상하게 한다. 남북 경제 협력, 북한 돕기 운동, 리틀엔젤스단의 평양 공연, 언론사의 대북 접촉, 북한의 예술 문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에서 민간 부분과 시민 단체의 역할이 증

진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일부에서 이러한 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과 시민 단체의 교류는 지속적인 흐름을 이루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교류는 과거 정부 주도의 교류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적 활동이 주된 축을 이루면서 과거와 같은 냉전 논리나 정책 논리와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 관계의 역사성과 사회 문화적 접근의 의의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은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일차적으로 정치적 측면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최소한의 정치적 조건의 개선없이 다른 영역의 접근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남북 관계에서 정치적 문제는 교류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던 주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산 가족 문제가 번번이 정치적 걸림돌

을 넘어서지 못했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규정성을 입증한다.

이러한 정치적 장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남북한 정부 모두의 한계였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대화 상대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였다. 양 체제는 서로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권위주의적 동원체제를 성립시켰다. 남한 사회는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에 기초해서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문제의 정치적 규정성을 지나치게 확대시켰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학적 담론¹⁾의 과대 확장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하에서 통일이란 이념과 힘의 경쟁 속에서 획득하는 체제 승리의 문제였고, 더욱 적나라하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문제와 동일시되었다.

한편, 통일 운동의 지향 역시 남북의 이념적 체제 대결의 효과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 점은 남북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일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일 문제는 반공을 축으로 하는 국가 이념의 기준에서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기 일쑤였다. 때문에 정부의 통일 방안과 다른 함

의를 갖는 통일 논의의 형성 시도는 '북한의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시민 사회 내에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그 결과, 통일 운동은 추상적 민족주의 논리나 인도주의 논리에 의해 대중적 기반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통일 운동은 논의의 현실성을 상당 부분 희생하는 대가로 자신의 정당성을 구해야만 했다. 이른바 민족주의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운동, 최소한의 인간 윤리에 호소하는 북한 돕기 운동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의 분화 과정에서 공식적 통일 방안이나 이에 맞서는 통일 동의 논리는 위기에 처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일이라는 목표가 정권의 정략적 이해 관계 속에서 제기되어왔음을 깨닫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이후 불거진 이른바 '북풍 공작' 논란은 남과 북 정권의 공통의 이해 관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권력 유지의 논리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또한 기존의 통일 운동 역시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민족주의²⁾에 미달하는 감성에 의해 주체를 형성해온 역사성때문

1) '정치학적 담론'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것은 개별 정치학의 연구 정향을 의미한다기 보다 정치학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시선이 가지는 특성을 의미한다.

에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민감하지 않은 세대와의 단절을 경험한다.³⁾ 새로운 세대는 여전히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 속에서도 국가·민족·집단이라는 당위적 귀속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은 하나다”, “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장은 그들에게 아무런 호소력도 가지지 못하는 구호가 되고 있다.

상황의 변화는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남한 사회의 발전 과정은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다원적 이해 관계를 형성시켰고, 이는 통일이 민족의 숙원이라는 도식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투여하는 환원될 수 없는 개인·세대·집단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⁴⁾ 이는 과거처럼 동질적 국민으로서 동원되는 체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회 통합 모델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통일의 문제가 서로 상이한 개인·세대·집단의 상이한 이해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되

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통일 문제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통일 문제에 관한 사회 문화적 접근은 남과 북의 차이를 억압하면서 어느 한 편의 기준으로 사회를 동일화한다는 문제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 설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은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는 주로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접근은 남북의 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격차와 사회적 차별,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복지 문제, 나아가 정치 문화 등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포괄적 문제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접근은 사회의 역사성이나 문화의 다층성을 일차적으로 인정하면서 어느 한 사회의 구성 원리나 문화적 원리가 절

2)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민족주의란 백낙청 선생이 사용하는 민주적·공화주의적 민족주의와 유사한 함의를 갖는다(창작과 비평사(1998), “독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버마스의 견해”, 『흔들리는 분단체제』).

3) 학술진흥재단이 발주한 「남과 북: 문화 통합」 프로젝트에서 행한 대학생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은 “촌스러운 사람은 끔찍하다”, “사투리 쓰는 사람과는 같이 살기 싫다”,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거리낌없이 말한다.

4) 흥미로운 논점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 경향으로서 반공주의가 단순한 통치 이념이 아니라 특정 사회 계층에서 대중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권혁범(1998), “남한 반공주의의 회로판 읽기”, 한국문화인류학회 발표 논문집). 이는 과거 ‘지킬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 이해 관계를 갖는 사회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적 기준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할 때만 성립가능하고 생산적일 수 있다.

특히, 현시점에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사회 문화적 접근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의 극심한 체제 위기와 식량난은 남한 사회의 잠재된 교류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를 제한시킬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시급한 경제 교류와 연관되지 않은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 접근은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라는 문제 의식과 차원을 달리한다. 사회 문화적 접근은 이러한 교류를 구성 부분으로 하지만, 교류 자체를 절대화하기 보다는 남북이 가지는 사회적 격차가 파생시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남북이 경쟁으로 인한 편견을 극복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 사회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은 동질성 회복이라는 문제 설정을 존중하면서도 문제를 그 차원으로 해소하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직면한다. 말하자면, 과거의 공통성에 착안하면서도 서로 다른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나아가 통일의 규범성과 현실성 사이의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준거하고 있는 전제를 재검토하고 상대화시킬 필요를 부각시킨다.

특히, IMF관리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남한 사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체제였으며, 최근 최악의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유일체제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남과 북의 사회 문화적 통합은 어느 한 사회의 기준으로의 수렴이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남과 북 자체의 변화를 포함하는 과정적이고 미래적인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⁵⁾ 사회 문화적 통합이라는 문제 설정은 바로 남과 북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문화적 논리를 상대화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소수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사회 체제의 건설이라는 과제로 압축될 수 있다.

5) 조한범(1989), "남북의 사회 문화적 통합 과정에서 시민 단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대회 자료집.

이와 같은 과제 설정은 사회 문화적 통합이라는 문제 설정이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 사회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로써 확대되어야 함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사회 개혁과 남북 관계 개선 사이의 연관성

남한의 공식적 통일 방안이 단계적·기능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사회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사태의 전개였다고 할 수 있다. 단계적·기능적 접근법이 비정치적인 교류의 논리를 중시하고 남북 사이의 의존 관계를 심화시켜 통일에 이끈다는 논리라고 할 때, 남한의 역사 속에서 통일 논의의 전개 과정은 체제 논리에 구속된 채 자신의 통일론을 현실화할 비정치적 민간 운동의 다양한 논의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낳았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통일을 위한 건전한 민간 부문의 민족적·민주적 의식을 억압한 결과, 사회 문화적 접근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길에 이를 내부 역량의 발전을 억제했다. 말하자면, 사회 문화적 접근의 상이 아직도 미정립된 사정에는 정치 논리가 대중의 통일 열망을

포획·징발한 채 시민 사회의 내적 동력을 억압한 역사적 경과가 반영되어 있다.

사회 문화적 통합이라는 문제 의식은 남북한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사회 문화적 통합이 남북의 경쟁 의식과 대결 문화가 격화되어온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가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로 상이한 체제 논리 속에서 배타적 감정을 지속시켜온 양 사회가 사회 문화적 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면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이 사회 문화적 통합의 의의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적인 조치와 노력이 극히 부족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개혁을 통한 새로운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긴요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행히도 남북한 사회 문화적 측면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접근에 대한 주목은 몇가지 변화에 의해 논의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일차적으로 동서 냉전 구도의 와해는 냉전의 축을 이루는 이념적 대결을 상대화시켰으며, 동서 냉전 구도의 와해 속에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경험은 정치 경제적 통합의 문제점을 노정해 사회 문화 통합이라는 문제 설

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⁶⁾ 또한 남북간의 균형 관계의 와해와 남한 내의 민주 역량의 성장은 남북 대결의 연장선 상에서 벌어지는 이념 대결의 쟁점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으며, 대북 교류 사업에서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90년대 들어서 전면화되는 북한의 경제 위기는 체제의 기본 요건인 식량 문제를 본격화시키면서 대북 지원이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통일 문제에 관한 상당한 식견을 갖춘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하고, 그만큼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대한 희망을 부풀게 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 분리 원칙, 남북 관계의 공식 채널화 추진,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협의체 모색, 교류 활성화 조치, 통일 관련 부처간 기능 분업의 정립 등으로 대변되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입안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으로 대변되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해 정경 분리 원칙과 민간의 자율성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선에서 대북 관계의 큰 틀을 조율하고 있는 듯 보인다.⁷⁾ 북한도 새정부 들어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당 정도 자제하고 민간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 수용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새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잠수함 사건과 최근의 미사일 논란, 그리고 대화 채널의 상대자로서 정부를 배제하려는 태도 등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일정한 제한성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는 북한이 남한체제의 전복이라는 목표에 종속해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보다는 자신의 심각한 체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 문화적 접근 자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 과정에서 민간 영역의 역할을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제한 바와 같이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적으로 교류가 상대를 전제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과

6)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H. Minkenberg(Oct.,1993), "The Wall after the Wall: on the continuing Division of Germany and the Remaking of Political Culture," *Comparative Politics*, vol.26, no.1.

7) 북한의 입장에서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는 주는 주체와 받는 객체의 분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신정부가 보이는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정책'과 '햇볕 정책' 등 정책 기조를 특징짓는 용어가 북한에 어떻게 수용될지에 대해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의 내적 위기는 교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 남과 북이 시급한 위기 관리에만 집중할 채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취약해져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급한 교류 이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극도의 식량난과 체제 위기로 인해 자신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교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북한이 체제 관리의 문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한, 민족적 이익이라는 명분은 사실 형해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의 입장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교류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말하자면, 인도적인 대북 교류 이외의 사회 문화적 교류를 포함하는 사회 문화적 접근은 상당 기간 지부전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 문화 교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남한 내부적으로도 존재한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태도는 매우 갈등적인 문제다. 금강산 관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최근의 갈등

양상은 남북 대화가 아니라 남남 대화가 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시사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에 관해 보수 헤게모니가 매우 강한 조건에서 정책 선회는 우파의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우파는 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부각시키면서 “언어 코드가 달라 일을 할 수가 없다”, 나아가 “햇볕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만 매달린 채 안보 문제에 무감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한국의 우파는 기업가적 합리성은 물론 관료적 합리성에도 미달하며, 대북 관계 개선에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⁸⁾ 특히, 개별 사안에 대한 이견이 상대에 대한 극단적 공격으로 쉽게 전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 문화적 통합은 아득한 과제일 뿐이다.

이 점에서 사회 문화적 통합 성과를 확보하고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가기 위해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맥락이 있다. 사회 문화적 접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화’를 통일 지향적 또는 공존 지향적 문화로 바꾸어가는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매개로 한다. 분단체제 속에서 형성된 반개혁의 이해 집단들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전

8) 물론, 현 정부의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는 선에서 우파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우파는 어념적·도덕적 기초, 나아가 대중 기반의 취약성때문에 정부의 정책 외부에서 자신의 이념을 대중적으로 실천할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제에 비추어볼 때, 분단체제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 원리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이 사회 문화 교류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전향적 정책과는 별도로 민간 부분과 시민 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시민 사회 내의 건전한 상식과 공공성의 논리가 확대되고 그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사회 문화적 교류의 성과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의 개혁 작업의 성과도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황과 과제

남북 사이의 사회 문화적 교류 노력은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 문화적 교류는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한다는 목적에 종속되기 일췌였다. 과거 교류 제안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안이 많았다. 또한 사회 문화 교류 제안의 주체가 정부로 한정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다.

90년대 들어서 비로소 사회 문화적 교류

의 법적 장치와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에 이른다. 정부는 1990년 2월 「남북문화교류 5원칙」을 발표했으며,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남북문화교류 5원칙」은 문화 교류 과정에서 ① 분단 이전의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우선 교류하고, ② 승부 및 경쟁적 분야는 배제하고, ③ 전통 문화의 원형을 변형 훼손하는 표현 방식은 지양하고, ④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며, ⑤ 공동 실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한다 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⁹⁾ 이는 민족 문화의 공통성에 착안하면서 남북이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관심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특히,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남북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담고 있는 의의가 있다. 새정부는 여러 차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남북 관계가 좀 더 제도화될 가능성은 크다.

9) 「남북문화교류 5대원칙」, 1990. 2.

주목할 만한 사실은 90년대에 이르러 남북 교류의 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한 인적 교류 현황 가운데서 주민 접촉 신청 건수가 1993년부터 1,000건을 넘기 시작하여 경향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승인률도 1989년 58.3%, 1990년 87.6%에서 그 이후로는 90% 이상의 승인률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분야별 접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분야별 승인률은 이산 가족(99.4%), 경제(95.9%), 교육 학술(91.6%), 체육(90.1%), 관광 교통(93.6%), 과학 환경(92.6%)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문화 예술(82.0%), 종교(79.3%), 언론 출판(82.3%)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¹⁰⁾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종교·언론 분야가 상대적으로 승인률이 낮다. 또한 각 분야별 신청 건수도 전체 7,700여 건 가운데서 이산 가족과 경제 분야가 5,900 건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즉, 사회 문화적 교류에 해당하는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은 상대적으로 신청 건수도 많지 않고, 성사율 자체도 타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90년대 남북한 교류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분야는 수재 피해와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돕기 운동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돕기와 관련되어 남북어린이깨동무,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등의 단체가 결성되었고, 이 조직들은 북한어린이돕기, 의료품 지원, 식량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 단체와 민간 단체의 북한 돕기는 정부나 자본의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지만, 북한의 식량난 현실을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조직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이 금식운동, 거리모금, 단체모금, 소득1%적립, 기쁨나누기, 1주일1끼굶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쓰기, 통신방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민 단체의 활동은 정부나 자본이 주체가 되는 북한 지원과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이 시혜라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데 반해, 시민 단체의 지원은 북한 돕기의 의미와 위상 및 방식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 둘째, 정부가 주체가 되는 지원은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단지

10) 이 통계치는 1989년부터 1998년 전반기까지 이루어진 분야별 남북 인적 교류 현황을 기초로 한 것이다.

동원해낼 뿐인 데 반해, 시민 단체의 지원은 시민의 참여와 동참을 촉구하고 활동의 내역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대내적 조건과 정책적 고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 반해, 시민 단체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상황에 의존적이지 않고 정책적 고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북한 돕기는 사회 문화적 접근의 전망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 돕기는 사회 문화적 분야의 교류는 아니지만, 남북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사회 문화적 접근의 단초를 보여준다. 건강하고 균형있는 양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회 문화적 접근의 전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파국적 결과를 막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체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간 교류보다 민간과의 교류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 단체가 주도하는 북한 돕기는 장기적으로 민간 사이의 사회 문화 교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역사적 경과는 향후 남북의 사회 문화적 접근의 성과를 확대하는 데 몇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사회 문화적 교류의 독

자성과 자율성, 나아가 자신의 기준에 대한 상대적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정치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남한의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문화는 '혁명 문화'로 대변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기준에서는 남한의 '대중 문화' 역시도 체제에 위협적인 문화적 요소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사회 문화에 대한 양 사회의 기준을 상대화시키지 않고서 사회 문화적 통합은 물론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마저도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 단체는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가능한 교류부터 활성화시켜야 하며, 정부는 북한의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장기적인 통합 과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 문화적 접근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남한 내부의 변화를 위한 각 부분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변화없는 남한의 정책 변경이 위험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한의 유연한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금강산 관광 계획에 대한 반대는 남북 관계에 대한 편협한 시각

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교류는 서로를 변화시킬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남북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 단체는 남북 관계가 평화와 상호 존중의 원리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대북관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언론의 내부적 각성과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사고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제한 바와 같이, 남북의 사회 문화적 통합은 어느 일방의 기준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계기여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 각 사회가 발전시켜온 제도와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하고 사회적 발전 전망에 대한 토론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망이 확보될 때 개별적 교류나 협력의 성과가 무르익을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본고는 사회 문화적 접근의 의의를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향후 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원론적 입장의 개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분단이라는 규정성 속에서 형성되어온 제도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전제하는 지난한 과제다. 특히, 50여년에 이르는 분단 역사는 민족 구성원에게 수많은 고통의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삶을 옥죄고 있다.

그만큼 남북의 새로운 관계 설정은 나 자신으로부터 동떨어진 과제가 아니다. 사회 문화적 접근은 바로 나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는 새로운 주체들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문제 설정과 실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각 주체가 오늘의 현실을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 속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의 풍부한 성과도 가능할 것이다. 

11) 특정한 사안이 단기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례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수경 양의 방북은 남북 사이의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북한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남북 사이의 '적대적 의존 관계'는 일방의 선도적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변명이 되는 관계에서 어느 한 편의 변화없이 상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